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사업 지원
2025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운영 협약서

2025. 5.

서울특별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25년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어르신 국제노인영화제 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어르신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사업』의 일환인 “어르신 국제노인영화제” (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 가 『어르신 국제노인영화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가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업” 이라 함은 「어르신 교육문화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시와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4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25년 어르신교육문화활성화 「어르신 국제노인영화제」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12
3. 지원금액 : 50,000,000원 (※자부담 5,000,000원 별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5. 6. 9.~ 6.13 5일간 영화제 진행(개·폐막식)
2. 영화제 부대행사 및 관객과의 대화, 특별프로그램(변사,배리어리 등)
3. 그외 향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하고 시가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공익추구·비정치·비영리의 원칙) ① 시와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협약체결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조사업자 선정이 소급 취소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이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는 사업내용을 확인·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 시 집행금액에서 공제 또는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 2. 보조사업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 3.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분할 교부(1차70%,2차30%)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전액 일괄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 ②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에 교부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 부터 사업종료일인 2025년 12월12 일까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진행 중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된 회계책임자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익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는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⑧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⑨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에 따른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⑩ 보조사업자는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사업비(보조금과 자부담 포함)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후 7일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⑪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⑫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마감일(2025.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부담의 사용)**
- ① 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②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집행비가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정산할 때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은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의 총편성예산액 대비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적용한다.)
 - ③ 자부담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1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행보증보험료 가입을 위해 사용한 자부담은 사업선정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도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⑤ 부적정 집행 자부담금은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가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보조사업의 특성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교부조건을 달리 할 수 있음

(예시)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 등 창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근거법령인 「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지방보조금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 ③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고하고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 참여단체와 계약(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외 방법으로 금액을 일괄 지급할 경우 사업 참여단체 내 스태프 및 출연진 등 개별 인건비 지급 등 세부 사용 내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탬e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보조사업자”는 2항의 정산서와 관련서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3. 시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14. 기타 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

에게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전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4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저작권) 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보조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0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정 상 울(묘장) (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